

깊어지는 불황과 주류산업



박 시 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1. 환란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얼마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계는 '현재의 경제상태가 지난 80년과 98년의 국가적 위기를 제외하고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전제하고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년 2분기 경제성장률 1.9%는 80년 -2.1%, 98년 -6.75 이후 최저수준이라며 경제난 극복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산업일선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상반기중 우리경제는 외환위기가후 4년만에 처음으로 실질소득 감소를 겪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년 작년 같은 기간대

■ 목 차 ■

1. 환란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2.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 실종
3. 산업공동화 촉진하는 투자위축
4. 수출이 경기 지탱하는 버팀목
5. 소비 내년 하반기 회복 예상
6. 내년 4% 실질성장 가능할 듯
7. 주류산업 구조조정 강화해야

비 2분기중 실질 GNI는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9%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같은 소득지표가 보여주는 대로 올들어 경제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를 비롯한 각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경제는 5-6%정도의 건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하향 수정을 거듭함으로써 이제는 3%정도의 실질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년 1분기에 3.7%의 성장을 보인 우리경제는 2분기에는 성장률이 1.9%로 딱 떨어졌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비롯한 일부 전문기관들은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4.2조원 규모의 추경편성과 통화당국의 금리인하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실질GDP 성장률을 2.7%로 하향 수정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대풍파해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하향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등 대부분의 민간연구기관은 대풍 '매미'로 인한 피해등을 고려해 올

< 표 1 > 2003년 경제전망

구 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6.3	3.7	2.4	3.0	3.1	3.1
총소비	6.2	1.2	-0.6	0.9	2.2	0.9
민간소비	6.8	0.9	-1.1	0.6	2.1	0.6
정부소비	2.9	3.5	3.0	3.0	3.0	3.1
총고정투자	4.8	4.8	1.7	5.6	3.9	4.0
설비투자	6.8	1.6	-4.1	1.4	5.1	1.0
건설투자	3.3	8.1	6.6	8.9	3.1	6.4
총수출(물량)	14.9	17.3	16.5	11.0	8.9	13.2
상품수출	17.1	19.9	18.4	11.1	8.7	14.2
총수입(물량)	16.4	18.0	15.7	11.7	11.0	14.0
상품수입	16.9	19.0	16.2	12.1	11.0	14.4
경상수지(억달러)	61	-17	23	7	5	18
상품수지	142	13	53	29	31	126
수출(금액)	1,626	445	465	447	472	1,829
(증가율)	(7.5)	(23.6)	(14.5)	(9.2)	(4.9)	(12.5)
수입(금액)	1,484	433	412	417	441	1,703
(증가율)	(7.7)	(31.5)	(13.7)	(9.6)	(7.1)	(14.8)
소비자물가	2.7	4.1	3.3	3.1	3.1	3.4
실업률	3.1	3.6	3.3	3.4	3.5	3.5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해 경제성장율을 2%대로 하향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가 3% 실질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보임으로써 경제위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실질 성장률이 지난 2001년의 3.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6.7%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면 위기상황이라는 재계의 지적은 근거가 있는 셈이다.

외국 연구기관들 역시 올해 우리경제를 비판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우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1%대의 저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없지 않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올해 우리경제의 침체는 경기변동적인 요인보다는 소비와 투자위축에다 노동불안 등이 겹친 구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회복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는 그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민간소비 위축, 대규모 파업을 비롯한 노동불안, 기업의 투자위축 등이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피해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태풍 피해, 고질적인 부동산투기 바람,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저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불안 등도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 실종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민간소비는 올해 연속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민간소비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민간소비가 단기간에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으로 고용기회가 줄고 있는데다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대로 개인 및 가계의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된 것도 민간소비 위축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자금흐름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과거 금융대출의 주된 수요자였던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줄어든 반면 가계부분이 금융대출의 주된 고객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과 투자위축, 부채비율 규제등으로 인해 금융권에 대한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크게 감소한 반면 아파트 구입등을 위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대는 한동안 아파트 구입을 비롯해 민간소비를 증가시켰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이 이르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저축을 통해 자금공급을 담당하는 가계부분은 자금수지면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이러한 저축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업부분의 자금수지는 적자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가계 및 개인대출이 급증함으로써 가계부분은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은 적자상태로 전환됨으로써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분의 부채규모는 45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불량자수도 갈수록 늘어나 300만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가계대출에 따른 후유증

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소득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가계는 이 같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아파트 등 부동산구입에 투입된 것을 감안할 때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가계의 부채부담이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민간소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재래 상가는 물론 고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백화점들조차 매출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민간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불황이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4.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의 내용에 비추어 경기부양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제외하면 추경의 대부분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도소매판매 추이등 소비지표의 움직임에서 2분기를 기점으로 소비의 감소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 등의 경우 하반기들어 판매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성장에 따른 고용기회의 제한과 실질소득의 감소, 과도한 가계부채 등에 비추어 민간소비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 산업 공동화 촉진하는 투자위축

민간소비 위축과 함께 우리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과거와 같이 무모한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 설비투자를 주도해온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라 오너의 결단에 의한 투자행태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된데다 부채비율 규제등으로 기업들이 차입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덩치키우기 보다는 수익중심의 내실경영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불안과 규제등 제도와 환경적인 요인도 기업들의 투자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불안은 상당정도 해소되긴 했으나 참여정부 초기의 정책 기조가 친노동적인 성향을 띠는 가운데 성장보다는 복지에 우선성을 두는 듯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하는 경우 성장률은 둔화되고 기업환경은 그만큼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노조 파업사태등 일련의 대규모 파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우려는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욕, 다시 말해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형 사업장은 물론 화물연대의 파업등 대규모 분규가 잇따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등도 기업들의 투자욕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라 할수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과 대규모 파업사태는 우리나라가 파업공화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게 됐다. 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는 전투적인 노조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부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로 노동불안이 꼽히고 있다. 게다가 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국내투자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중국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땅값과 인건비가 비싼데다 노사분규까지 겹치다보니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해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해외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40%정도가 1-2년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길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조사도 나왔다.

대기업들의 경우 그동안의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위한 자금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선포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와 총액출자제한등 규제도 투자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쌍용자동차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계획등이 수도권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비롯한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투자 위축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직후에 연간 150억달러를 웃돌았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9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30억달러에도 못미치고 있다. 경기침체와 노동불안등을 포함한 투자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심각한 투자부진은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물론 향후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외국인투자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비추어 현재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등 주력산업들조차 앞으로 5-10년 정도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조사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부진으로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통적인 주력산업들은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와 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위축은 단순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10대 신성장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개선되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신산업 육성계획은 단순한 계획에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하지 않을수 없다. 결국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수출이 경기 지탱하는 버팀목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우리경제가 낮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라크전의 여파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전자제품 등 주력산업들의 수출이 괄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파업과 물류대란, 중국의 사스 여파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중 수출물량은 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8월중에서 11% 증가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버팀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수출도 점차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좌우하는 세계 경제는 이라크전등과 불안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IT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소비심리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수출을 통한 국내 경기회복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주가상승 등 부분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스 여파로 한때 주춤했던 중국경제는 여전히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으로써 세계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중국경제는 막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지만 동남아 국가들도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럽경제의 중심인 독일의 경우 소비위축과 실업증가 등으로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냄으로써 수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도 금년 하반기를 시점으로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어 내년에는 교역량 증대와 함께 4%정도의 실질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계경제 사정의 호전이 우리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올들어 외국인투자유입과 수출호조등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꾸준히 떨어져 9월들어서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150원대마저 깨짐으로써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같은 환율하락은 국제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가운데 일부 노동집약상품의 경우 이미 체결된 수출계약마저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은 불과 1달새 환율이 10%나 떨어진데다 앞으로 하락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부진과 환차손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자동차등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달러당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져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조선, 전자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원화강세에 따라 경쟁력과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출전망을 어렵게 하는 또 한가지 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이다. 특히 미국이 보호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얼마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초를 다자간 협상에서 쌍무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세계 시장 개방을 위해 다자주의와 쌍무주의를 병행해오고 있지만 다자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쌍무주의를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WTO 협상이 개도국의 반발로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상무부에 불공정 무역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을 상대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일차적으로 중국, 한국등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어려움에 처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조조정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또 한가지 배경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적자 때문이다. 올들어 미국은 분기별 무역적자 1천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4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제회생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부시행정

부로서는 무역적자 확대가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덤핑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저달러정책 등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무역환경을 극복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도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집약상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 가전, 화학등 많은 자본집약적인 상품들마저 국제시장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등 후발국들에게 빠른 속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 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어섰다. 비록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역조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건수가 크게 늘어나는등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경제는 3-4% 정도의 실질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5. 소비 내년 하반기 회복 예상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민간소비는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겠지만 증가율은 1.0%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의 경우 이라크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SK 글로벌 사태와 신용카드사 부실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중 통계청의 소비자 평가지수는 62.7에 그쳐 지수 작성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중 발생했던 여러가지 악재들이 진정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증가로 이어지려면 소득증가와 실질구매력 증대등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 상반기중 소비가 급감한 주된 원인의 하나는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1분기중 GDP는 3.75증가했으나 구매력을 나타내는 GNI는 1.8% 감소함으로써 소비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러나 금년 4분기부터는 실질성장률이 3%대로 올라서고 교역조건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들어 크게 둔화된 실질 구매력도 하반기 이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임금에 취업자수를 곱해 산출한 근로자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지난해 4분기중 12.1%를 기록한 후 금년 1분기중 9.1%, 4-5월중에는 4.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9.3%에 달하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올 상반기에는 7.1%로 낮아졌고 취업자 감소와 물가상승이 겹쳐 소비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반기 이후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낮아진 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식,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민간소비는 소득, 금리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를 자산효과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자산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80대 들어 플러스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에 있어서 자산효과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하반기중 자산효과는 민간소비를 0.1%정도 높이고 내년에는 0.3%포인트 이상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의 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자산효과로 인한 소비증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표를 종합할 때 금년 4분기 이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년 4분기 이후 경제불안 요인 해소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자산효과등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등을 위해 가계 신용공급 축소등이 지속됨으로써 소비증가세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비증대를 주도해온 가계 신용공급의 경우 지난 1분기중 가계 신용잔액은 작년말에 비해 0.1%증가에 그쳐 거의 정체상태이고 민간소비와 직결되는 판매신용은 금년 1분기중 5조4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 비율도 작년말 201.8%에서 금년 1분기에는 171.1%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본격적으로 신용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가계 신용공급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자금 대출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사들은 2005년말까지 부대업무 비율이

50%로 축소됨에 따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말 현재 전업계 및 은행 겸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율은 60.9%로 앞으로 11% 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 뿐만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대부분이 재무건전성을 위해 과거와 같은 무모한 공격적인 경영을 지양하고 보수적인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6. 내년 4% 실질성장 가능할 듯

올해 우리경제는 잘해야 3%정도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얼마전 올해 실질성장률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간에 이견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태풍 매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회복기미가 거의 안보이는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마인드 등을 감안 할 때 올해 3%정도의 성장을 달성하기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부분의 민간연구기관들과 외국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3%미만으로 잡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2.7%였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성장률이 3%를 넘어야 연간으로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8%의 저성장에 그친 2분기에 이어 3분기의 성장률도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4분기에 성장이 4%선을 넘어서야 연간으로 3%정도의 실질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내년부터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내년에는 4%정도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

정이다. 얼마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민간소비 회복시점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46.6%는 '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환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최고경영자들도 15.5%나 됐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올 3분기의 경우 1.7%, 4분기의 경우 3.4%에 지나지 않아 금년 안에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내년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경기회복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보는 응답은 20.7%, 2분기는 34.5%로 나타나 내년 2분기에 들어서야 경기호전을 어느정도 체감할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이같은 경기인식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 시점과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28.8%는 내년에도 투자를 전면 유보하겠다고 밝혔고, 올해와 같은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응답은 36.5%, 늘리겠다는 응답은 33.7%에 그쳐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 주류산업 구조조정 강화해야

주류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특히 국내 주류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낮고 거의 내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곧바로 주류산업의 매출과 수익성과 직결된다. 울들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내주류 산업은 매출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고가 위스키, 포도주등을 중심으로 수입 주류의 국내 시장 침투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얼마전 외국언론에서 '한국시장은 세계 위스키업체의 희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고가 수입 주류가 밀려들어오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한 병에 천만원이 넘는 고가 수입위스키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난속에서도 이처럼 고가 수입 주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고급 외제 주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이같은 주류소비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 축소등 제도적인 변화도 주류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지속될 경기침체와 수입 주류의 증가등 주류산업의 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류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성 향상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국내 주류산업은 주류의 종류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품질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는 일종의 기호품으로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매우 중요하다. 또 주류만큼 브랜드가치가 중요한 상품도 드물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개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개발 전략을 세우고 특소세 인하등 정책적인 뒷받침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내년 2분기에 가서야 경기회복을 어느정도 체감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분간 주류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산업의 환경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외국의 고가 주류의 수입증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이같은 경쟁 속에서 국내 주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우선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류업체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는 다품종 생산체제를 지양하고 단일 품종에 특화하는 전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주류 업체들은 위스키면 위스키, 포도주면 포도주등 특정 주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주류 업체의 경우 주로 국내시장을 타킷으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생산함으로써 특정 주류에 대한 일류 브랜드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국내 주류산업도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 개척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때가 됐다. 세계 시장이 단일시장화 됨에 따라 주류의 무역거래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류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류를 주요 수출품목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칠레등의 경우 포도주를 자국의 대표 주류로 선정해 수출품목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세계적인

술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외국의 고가 주류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주류의 세계 시장 진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주류 무역에서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류도 무역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세수입 대상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주류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주류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할 것이다.

이처럼 품질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주류업계는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구조 개선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단기간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경영전략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매출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기침체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대부분의 내수 업종들은 현재의 경기 상황이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주류 산업도 비

슷한 상황이라 할수 있다. 이처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외형확대보다는 내실경영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잇단 대규모 파업사태와 물류대란, 노동불안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등 후진적인 노사관계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은 비슷하면서 인건비가 중국보다 10배가 넘을 정도의 고임금하에서 노동불안까지 겹치는 경우 경제회복은 지연되고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와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마저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국 근로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영진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요구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처럼 불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기업은 불황이 없다는 말은 주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The man who makes no mistakes does not usually make anything.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통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 Edward John Phelps -